

주간 통일정세

2017-3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8.26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가상훈련 참관...“南평정 생각해야” 위협(연합뉴스)
		北 경흥지도국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연합뉴스)
		北 전국적맹조직, ‘선군절’ 57돌맞이 혁명전적지 답사(연합뉴스)
	8.27	北, 청년절 앞두고 중앙보고회...“반미대결전서 기개 떨쳐야”(연합뉴스)
		北, ‘청년절’ 90주년 하루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8.28	北, ‘대북 군사교류 중단’ 우간다 주재 대사 교체(연합뉴스)
		北 신문, ‘청년절’ 맞아 김정은 체제에 충성 강조(연합뉴스)
	8.30	北, 화성-12형 발사확인...김정은 “美연동 계속 주시”(연합뉴스)
		北, 태평양에 미사일 추가발사 ‘예고’...ICBM급 쏠 가능성도(연합뉴스)
	8.31	北 국토환경보호상, 국제회의 참석차 태국행(연합뉴스)
北 TV, ICBM급 추정 미사일 4발 동시발사 합성사진 공개(연합뉴스)		
9.1	北 신문 “美·日 공조, 가쓰라-태프트 밀약 방불”(연합뉴스)	
군사	8.26	北,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1발은 폭발”(연합뉴스)
		北 발사체 정체는?...한미평가 방사포·탄도미사일로 엇갈려(연합뉴스)
	8.27	美, 北발사체 분석 수정 “2개는 성공”...트럼프 보고받아(연합뉴스)
		北, 26일 쏜 발사체 비행고도 50여km...신형 발사체 가능성(연합뉴스)
	8.28	北, 신형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개발중...고체연료(연합뉴스)
		국정원 “8월 26일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 커”(연합뉴스)
		국정원 “UFG 잔여기간 · 9월 9일 北창립일 미사일 발사 가능성”(연합뉴스)
		美 “北간장 고조땀 F-35A 투입...교전 준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8.29	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완료’ 아닌 ‘핵실험 가능상태 유지’”(연합뉴스)
		北, 평양 순안 일대서 동해 방향 발사체 발사(연합뉴스)
		北, IRBM급 첫 정상각도 발사...실전 환경 ‘재진입’ 검증 가능성(연합뉴스)
		국정원 “北미사일 탄두 재진입 미확인...비행장 발사는 처음”(연합뉴스)
		軍 “北, 광 포위사격 준비하는 미사일 발사...추가도발시 강력응징”(연합뉴스)
8.30	北, 화성-12형 발사영상 공개...지상 거치대서 발사(연합뉴스)	
8.31	美, 전략무기 공세적 전개 전망...첫 ‘군사우선’ 될 듯(연합뉴스)	
	‘1~2시간내 평양진입’ 스텔스기·폭격기 실폭격 훈련 ‘무력시위’(연합뉴스)	

경제	8.28	국정원 “대북제재로 北 위기징후 없지만 일부품목 생산차질”(연합뉴스) 中 상무부, 北기업과 합작·투자금지로 “북한식당에 직격탄”(연합뉴스)		
	8.29	“불가리아 결혼식 비용이 北 김정은 주머니로”(연합뉴스) 中 창춘서 내달 1일 동북아박람회 개막…제재 와중 북한 참가(연합뉴스)		
	8.31	“北, 7월 옥수수 수입량 급증…전년 대비 420배”(연합뉴스)		
	9.1	안보리 제재 ‘무색한’ 북중접경…“북한 수산물 중국 밀수 여전”(연합뉴스)		
사회 문화	8.26	北, 평양시 여명거리 반영 우표 발행(연합뉴스)		
	8.27	北 속독교육 ‘열풍’…“과학기술 발전 촉매 역할”(연합뉴스) “北, ‘원산 에어쇼’ 돌연 취소…미사일 제재後 연료절약 목적?”(연합뉴스)		
	8.28	국정원 “北보위성, 체제불만자 색출…평양 전과자·무직자 추방”(연합뉴스)		
	8.30	“北 휴대전화 가입자 377만명…데이터전송 인터넷은 금지”(연합뉴스)		
외교 국방	8.26	日 아베 “北 미사일 발사에 고도의 경계감시 태세 유지”(연합뉴스)		
	8.27	北, ‘한미훈련 안보리 긴급의제 채택’ 요구서한 발송(연합뉴스)		
	8.28	北 신문 “해군질 맞아 SLBM 부각…“美 통제로 수장” 위협(연합뉴스)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北 나쁜 행동에 보상 원치 않아”(연합뉴스) 中, 단거리발사체 도발 北에 “자제하고 정세긴장 피하라” 경고(연합뉴스) 국정원 “유럽·중남미 국가, 북한 공관원 감축…북한 외교 고립 심화”(연합뉴스)		
		8.29	北 신문 “어떤 경제적 압력·군사적 위협에도 놀라지 않아”(연합뉴스) 트럼프, 北미사일에 “모든 대북 옵션 테이블에 있다”(연합뉴스) 中, 북한 미사일 도발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연합뉴스) 러 극동장관 “北 핵실험 탓에 많은 러-북 경제협력 중단”(연합뉴스) 유럽 “北, 추가 도발 자제해야”…北 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핵 개발 포기해야”(연합뉴스) 제네바 군축회의 北미사일 발사 규탄…北 “방어수단”(연합뉴스)	
			8.30	美 국방부 “北미사일은 IRBM”…초기분석 통해 첫 확인(연합뉴스) 조선신보 “美, 도발중단 행동으로 증명 않으면 포위사격 못 피해”(연합뉴스) 트럼프 “北에 25년간 터무니없는 돈 지불…대화는 답 아니다”(연합뉴스) 왕이 中외교부장 “北 도발, 국제 핵 비확산 체계 훼손” 비판(연합뉴스) 호주 “北 미사일 위협은 ‘예측불허’…구축함에 요격체제 검토”(연합뉴스)
	8.31			北 “안보리 의장성명, 자위적 권리 유린…전면 배격”(연합뉴스) 美 합참차장 “北 ICBM, 美본토 위협하기엔 아직 역부족”(연합뉴스) 분노한 트럼프, ‘대화무용론’ 천명…기존 대북전략 전환하내(연합뉴스) 北 매체, 美 B-1B-F-35B 편대 동시출격 비난…“부질없는 객기”(연합뉴스) 日 관방 “대북 추가제재로 원유·석유제품 수출규제 검토”(연합뉴스)

9.1	호주 총리, 북한에 “마피아 같다” 비난…연일 날 선 비판(연합뉴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부산선언’…“北도발 심각우려”(연합뉴스)
	“백악관, 대북옵션에 협상도 여전히 포함돼있다고 밝혀”(연합뉴스)
	영국·스페인, 북한대사 불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베트남도 北 탄도미사일 발사 비판…안보리 결의 준수 재차 촉구(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8.26	백령도 등 접령 가상훈련 참관	리명수, 리영길, 박정천	-
8.30	'화성-12형' 현지도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8. 26.

■ 김정은, 백령도 등 점령 기상훈련 참관…“南평정 생각해야” 위협(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이날(26일) “김정은 동지께서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경기를 지도하셨다”면서 “선군절을 맞으며 조직된 이번 대상물 타격경기는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전부대들의 긴밀한 협동 밑에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며 일단 유사시 그 어떤 작전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의 필승불패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대상물 타격경기는 강력한 비행대, 포병 화력 타격에 이어 수상, 수중, 공중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을 습격, 파괴하며 백령도, 대연평도를 가상의 섬들을 단숨에 점령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전함.
- 통신은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 6해병여단 본부, 연평도서방 어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 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 속에 잠기고 승리의 만세 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고 구체적인 우리 군 공격목표를 나열함.

2017. 8. 30.

■ 北, 화성-12형 발사확인…김정은 “美연동 계속 주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30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동원됐다”고 이날 밝힘.
- 이에 따라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에 낙하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꺾 포위사격에 동원하겠다고 밝힌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인 것으로 확인됨.

■ 北, 태평양에 미사일 추가발사 ‘예고’…ICBM급 쏠 가능성도(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29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에 이어 태평양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할 것을 사실상 예고함.
-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화성-12형 발사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고 꺾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밝힘.
- 이는 향후 군사적 도발의 무대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일본뿐 아니라 꺾음을 포함한 태평양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실제 유사 도발이 이뤄질 경우 미국과 일본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8. 28.

■ 北, ‘대북 군사교류 중단’ 우간다 주재 대사 교체(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대북 군사교류 중단 방침을 밝힌 우간다 주재 대사를 교체했다고 공식매체를 통해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이탈리아 공화국, 우간다 공화국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들로 문정남과 정동학이 임명되었다”고 짧게 보도함.
- 중앙통신은 앞서 2014년 9월 “우간다 공화국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명경철 동지가 임명되었다”고 밝힌 바 있어 약 3년 만에 북한 대사가 바뀐 것으로 보임.

2017. 8. 31.

■ 北 국토환경보호상, 국제회의 참석차 태국행(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이날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이 타이(태국)에서 진행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급(장관급) 회의들에 참가하기 위하여 3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짧게 보도함.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달 5~8일 방콕에서 ‘환경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장관급 서밋’(Asia-Pacific

Ministerial Summit on the Environment)이 개최될 예정이다.

-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산림복구와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등을 강조하며 환경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8. 26.

■ 北 경흥지도국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연합뉴스)

- 경흥지도국 창립 30주년을 맞아 안정수 노동당 경공업부장과 경흥지도국 일꾼과 종업원들이 26일 기념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北 전국직맹조직, '선군절' 57돌맞이 혁명전적지 답사(연합뉴스)

- '선군절' 57돌을 맞아 전국직맹조직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가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2017. 8. 27.

■ 北, 청년절 앞두고 중앙보고회...“반미대결전서 기개 떨쳐야”(연합뉴스)

- 북한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일(청년절) 90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중앙보고회를 열고 청년들에게 '반미 대결전'을 위한 결속을 강조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보고회에서 기념보고를 맡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 공업을 억척으로 다지는 데 적극 앞장섬으로써 반미 최후 대결전에서 조선 청년들의 영웅적 기개와 본때를 다시 한 번 힘있게 떨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전 비서는 청년들에게 ‘투철한 대적관념’을 지녀야 한다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도 말했으며, 이날 보고회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8. 27.

■ 北, '청년절' 90주년 하루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청년절' 90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젊은 세대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의 500만 청년전 위들은 주체 조선의 국력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천만 군민이 필승의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총매진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청년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더 부각 되고 주체적 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선전함.
- 이어 “우리의 청년 대군은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결사대”라며 “우리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도 위력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투철한 반미계급의식을 지닌 우리 청년들의 보복 의지”라고 주장함.

2017. 8. 28.

■ 北 신문, '청년절' 맞아 김정은 체제에 충성 강조(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90주년을 맞아 청년들에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핵폭탄이 되자”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수령 결사옹위는 조선 청년들의 최고의 애국, 최고의 영예”라며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수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증오와 복수의 불벼락을 퍼붓는 500만의 핵폭탄이 되자”고 호소함.
- 현재 북한 청년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청년은 약 5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은 기존에 청년들의 충성을 부각할 때 '500만 총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해 초부터는 '500만 핵폭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

2017. 8. 31.

■ 北 TV, ICBM급 추정 미사일 4발 동시발사 합성사진 공개(연합뉴스)

- 조선중앙TV가 30일 밤 방영한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 제목의 음악이 담긴 영상물 맨 마지막 장면에서 '화성-14'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이 나란히

- 세워진 지상 거치대 위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의 합성사진이 등장함.
- 4발의 탄도미사일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 미사일의 탄착점은 바다 건너에 있음을 시사했으며, 이 영상물에는 ‘화성-14’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여러 대가 백두산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의 합성사진도 등장함.
 -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는 노래는 김정일 집권 시기에 창작된 노래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과 합성사진 등을 추가해 영상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임.

2017. 9. 1.

■北 신문 “美·日 공조, 가쓰라-태프트 밀약 방불”(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미국과 일본의 최근 군사공조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방불케 한다면서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훈련은 이에 대한 경고를 담았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자멸을 재촉하는 군사적 공모·결탁’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지난달 벌어진 미일 합동군사연습과 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공조 내용을 열거하며 “가뜩이나 침예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반동들의 공조 책동은 지난 세기 초 미일 침략자들이 강도적인 가쓰라-태프트 협정(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조작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일본 반동들의 대조선 침략 야망”이라고 주장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8. 26.

■北,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1발은 폭발”(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옛새제인 26일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3발 쏘며 무력시위를 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모두 3발로, 이들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사체는 200km 이상 비행했으나 두 번째 발사체는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발사체 정체는?...한미평가 방사포·탄도미사일로 엇갈려(연합뉴스)

- 북한이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관해 한미 양국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 앞서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에 관해 “초기 분석 결과는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thre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라고 평가함.

2017. 8. 27.

■ 美, 北발사체 분석 수정 “2개는 성공”...트럼프 보고받아(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쏘아 올린 3발의 발사체 가운데 1발은 즉각 폭발하고 나머지 2발도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는 초기 분석을 일부 수정함.
- 태평양사령부는 수정해 다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thre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이라고 규정하고, 1발은 즉각 폭발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함.
- 그러나 태평양사령부는 나머지 2발은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약 25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정정했으며, 이는 한국군과의 합동 분석을 거쳐 초기 분석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함.

■ 北, 26일 쏜 발사체 비행고도 50여km...신형 발사체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50여km로 비행해 300mm 신형 방사포 또는 새로운 기종의 단거리 발사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비행 고도만 보면 이번 발사체가 300mm 신형 방사포와 유사하지만, 군이 평가하

는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보다 50여km를 더 비행한 것이 그런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북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 고도는 50여km로 분석됐다”면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비행 고도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힘.

2017. 8. 28.

■ 北, 신형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개발중·고체연료(연합뉴스)

- 북한이 중·준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중거리(IRBM)와 준중거리(MRBM) 지대지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을 개발해 시험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함.
- 북한이 개발 중인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기존 KN-02 지대지미사일과는 형상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알려졌으며, 연료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국정원 “8월 26일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 커”(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보고가 나옴.
- 국정원은 2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 2~3번 궤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며 “지난해 굴착을 중단한 4번 궤도는 올해 4월부터 준비 동향을 보고한 바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함.
- 국정원은 또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행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했다”며 “이번 발사체는 방사포라기보다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2017. 8. 29.

■ 北, 평양 순안 일대서 동해 방향 발사체 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29일 또 발사체를 발사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힘.

- 합참은 “발사체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임.

■ 北, IRBM급 첫 정상각도 발사…실전 환경 ‘재진입’ 검증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처음으로 실전적 환경에서 시험했을 수 있기 때문임.
- 북한이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발사 지점에서 약 2천 700km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으며,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550여km로 파악됨.
- 북한이 쏜 미사일은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임.

■ 국정원 “北미사일 탄두 재진입 미확인…비행장 발사는 처음”(연합뉴스)

- 국정원은 “북한은 오전 5시 57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비행장 발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산속 같은 야전에서 발사하려면 공사를 하고 발사체를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비행장 아스팔트 위에서 발사하면 기동성이 빨라지고, 비용 문제도 절감할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선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분석함.
- 국정원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성공과 관련해서는 “탄두 재진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상세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힘.

2017. 8. 30.

■ 北, 화성-12형 발사영상 공개…지상 거치대서 발사(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화성-12형의 발사 전후 과정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과 1분 35초 가량의 영상을 공개함.
- 사진에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가운데 화성-12형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에 이어 차량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어 미사일이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세워진 뒤 이동식 발사

차량이 미사일을 떠나는 모습도 공개됨.

- 이어 조선중앙TV는 영상을 통해 카운트다운 뒤 화성-12형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줬으며, 화성-12형 미사일이 내뿜는 불빛이 창공으로 멀어지다가 섬광이 번쩍한 뒤 화면에서 사라지는 모습도 나타남.

나. 한국 및 미국

2017. 8. 28.

■ 국정원 “UFG 잔여기간 · 9월 9일 北창립일 미사일 발사 가능성”(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과 관계 정립을 위한 최종 관문으로 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중요성을 간접 시위하는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함.
- 핵 및 미사일 실험 동향과 관련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2~3번 궤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는 방사포가 아니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보고함.
-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UFG 훈련 잔여기간이나 9월 9일 정권 창립일을 계기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 중”이라고 밝힘.

■ 美 “北긴장 고조면 F-35A 투입...교전 준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 히더 윌슨 미국 공군 장관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미 공군은 F-35A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태평양에 배치,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히더 장관은 최근(25일) 국방부에서의 기자 간담회에서 “F-35기가 최근 10만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돌파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 닷컴이 보도함.
- 그는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F-35기를 투입해 교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히더 장관은 F-35A기의 해외 교환 파견 일정, 배치 대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017. 8. 29.

■ **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완료’ 아닌 ‘핵실험 가능상태 유지’”(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 “현 단계는 ‘핵실험 준비완료’가 아닌 ‘핵실험 가능상태 유지’”라고 밝힘.
- 국정원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정보위 ‘북한 핵실험 준비’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이같이 전함.
- 국정원은 이어 “북한은 김정은의 결단이 있으면 단기간의 준비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궤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軍 “北, 꺾 포위사격 준하는 미사일 발사·추기도발시 강력응징”(연합뉴스)**

- 우리 군은 29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을 거론하며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냄.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소위 ‘꺾 포위 사격’을 운운한 데 이어 이에 준하는 사거리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 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우리 군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2017. 8. 31.

■ **美, 전략무기 공세적 전개 전망…첫 ‘군사옵션’ 뒀 듯(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를 보다 공세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보임.
-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관해 “상당히 긍정적, 협조적으로 미국 측이 우리 측 요구에 응했다”고 밝힘.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미국 전략무기의 공세적 전개 방안을 한국 측이 거론했고 미국 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설명이며, 정부 관계자는 “금년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1~2시간내 평양진입’ 스텔스기-폭격기 실폭격 훈련 ‘무력시위’(연합뉴스)**

- 일본과 괌에서 이륙한 후 1~2시간이면 평양 상공에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동시 작전을 펼친 것은 북한의 중거리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한 강한 무력시위로 평가됨.
- 미국은 지난 29일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이틀만인 31일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함.
- 특히 이들 전략무기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첫 연합항공차단 작전을 펼치며 공고한 연합방위태세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8. 28.

■ **국정원 “대북제재로 北 위기징후 없지만 일부품목 생산차질”(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28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은 현재 환율, 물가 폭등 등 위기징후는 없지만 일부 수출품목의 가격하락과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힘.
- 국정원은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대북 합작사업 금지를 포함해 외화수입이 연 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 국정원은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인력 송출 제재를 회피하려고 계약 일자를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으로 위조하거나 서둘러 인력을 내보낼 것을 지시 하기도 했다”고 설명함.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8. 28.

■ **中 상무부, 北기업과 합작·투자금지로 “북한식당에 직격탄”(연합뉴스)**

- 중국 내 북한식당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시행에 따른 중국 당국의 대북투자금지 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인민일보 영문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28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중국 상무부가 25일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북한이 그동안 중국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발하게 설립한 것이 식당이었는데, 사실상 이를 금지시킴으로써 기존 북한 식당들이 찬서리를 맞게 됐다는 것임.

2017. 8. 29.

■ **“불가리아 결혼식 비용이 北 김정은 주머니로”(연합뉴스)**

-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 영리활동’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29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주간지 ‘카피탈’(Capital)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2321호) 이후 현재까지 수도 소피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공관 부동산 임대사업이 계속되고 있음.
- 북한의 공관 부동산 임대사업은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며, 핵·미사일 장비·기술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내용이 국제사회 제재에 반영됨.

■ **中 창춘서 내달 1일 동북아박람회 개막…제재 외중 북한 참가(연합뉴스)**

- 중국의 3대 투자무역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제11회 중국-동북아박람회가 내달 1~5일 지린성 창춘(長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림.
-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린성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이 박람회에는 중국과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각국의 정·재계 인사와 기업이 참가해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상담과 우수상품·신기술·서비스 전시회를 개최함.
- 이번 박람회에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윈(蔡英文) 대만 총통 취임을 의식해 대만 대표가 개막식 초청에서 제외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측도 참가함.

2017. 8. 31.

■ **“北, 7월 옥수수 수입량 급증…전년 대비 420배”(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의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2만 1천t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7월 50t을 수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420배나 증가한 규모”라고 밝힘.
- 북한의 올해 7월 옥수수 수입량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3천 125t)보다도 6.7배나 많음.

2017. 9. 1.

■ **안보리 제재 ‘무색한’ 북중접경…“북한 수산물 중국 밀수 여전”(연합뉴스)**

- 북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에도 북한 수산물의 중국 밀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함.
- SCMP의 현장 취재에 따르면 북한과의 무역 거래의 70%가 벌어지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북한 수산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매일 수 톤씩 수입되고 있음.
-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납 광석, 해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안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중국 세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분기에 6천 800만 달러의 해산물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8. 27.

■ **“北, ‘원산 에어쇼’ 돌연 취소…미사일 제재後 연료절약 목적?”(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었던 ‘에어쇼’를 돌연 취소하기로 했다고 일본 NHK가 27일 보도함.
- NHK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9월 23일부터 이틀간으로

예정됐던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Wonsan International Friendship Air Festival)-2017’의 개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함.

- 북한은 작년 9월 원산 공항에서 조선인민군의 공군과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항공기 등 20기 이상의 비행기가 참가한 가운데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을 처음 개최한 바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 1만 5천 명 앞에서 미그(MIG)-29 전투기가 이륙해 공중을 선회하고 군용 헬리콥터가 무리 지어 저공비행을 함.

2017. 8. 28.

■ **국정원 “北보위성, 체제불만자 색출…평양 전과자·무직자 추방”(연합뉴스)**

-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대되자 보위성이 대대적인 체제불만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은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주민 피로감이 커져서 보위성이 체제불만자를 색출하고 평양 시내 전과자와 무직자를 추방했다”고 보고함.

2017. 8. 30.

■ **“北 휴대전화 가입자 377만명…데이터전송·인터넷은 금지”(연합뉴스)**

- 북한 인구 7명 중 1명꼴인 377만 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데이터전송과 인터넷이 금지돼 있어 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보기 등 오락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영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군사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남한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수학과 과학교육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8. 26.

■ 北, 평양시 여명거리 반영 우표 발행(연합뉴스)

- 평양시 여명거리를 반영한 새 우표들(개별우표 1종, 소형전지 1종)이 발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2017. 8. 27.

■ 北 속독교육 ‘열풍’…“과학기술 발전 촉매 역할”(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24일 “최근 교육 부문에서 속독교육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며 익명의 교육위원회 과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교육위원회 과장은 인터뷰에서 “속독교육은 신비한 속셈술, 기억술, 속독술을 가르치고 그것을 숙련시키기 위한 속독훈련을 진행하여 비상한 기억력과 속셈력, 읽기능력을 소유하게 한다”라며 속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속독 능력을 갖추는 것은 사람들이 풍부한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습득하고 활용하게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덧붙임.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8. 28.

■ 北 신문 ‘해군절’ 맞아 SLBM 부각…“美 통째로 수장” 위협(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해군 창설 68주년을 맞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을 통째로 수장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주체적 해군 무력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4월 이뤄진 SLBM ‘북극성’ 수중 시험발사를 거론하며 SLBM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제는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는 당시 공개됐던 언급을 다시 소개함.

-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인민군 해병들에게는 최신예 항공모함들이 한갓 비대한 변태 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만약 미제가 이 땅 위에 침략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미국 땅덩어리를 통째로 수장해버리자는 것이 일당백 해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주장함.

■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北 나쁜 행동에 보상 원치 않아”(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함.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시키는 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적 전략에 대해 (한국과) 논의하려 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함.
- 대북제재 법안을 주도하는 등 북핵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로이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됨.

2017. 8. 29.

■ 北 신문 “어떤 경제적 압력·군사적 위협에도 놀라지 않아”(연합뉴스)

- 북한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에게는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대미압박을 이어감.
-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힘과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정세논설에서 “비극은 미국이 아직 우리의 힘과 의지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저들의 그 어떤 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위협 공갈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를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트럼프, 北미사일에 “모든 대북 옵션 테이블에 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일본 상공을 가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위협적이고 안정을 깨는 행동들은 그 지역과 세계 모든 나라 사이에서 북한 정권의 고립을 확대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세계는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다”며 “이 정권은 이웃 나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에 대해 경멸을 표시했다”고 강조함.

2017. 8. 30.

■ **美 국방부 “北미사일은 IRBM”…초기분석 통해 첫 확인(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발사한 물체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파악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날 언론성명에서 “초기 평가는 IRBM 발사임을 보여준다”면서 “미사일은 일본 영토 북쪽 위로 날아가 일본 동쪽 육지로부터 약 500해리(926km) 떨어진 태평양 바다에 낙하했다”고 말함.
- 북한이 전날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부가 미사일의 종류와 성격을 규정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임.

■ **조선신보 “美, 도발중단 행동으로 증명 않으면 포위사격 못 피해”(연합뉴스)**

-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미국이 괌 포위사격을 피하려면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 중단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의 군사 도발에 대응한 화성-12형 발사 훈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결단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예고된 (괌) 포위사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조선은 핵전쟁 위험을 가지고 평화를 정착시킬 때까지 자기가 선택한 길을 주저 없이 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함.

■ **트럼프 “北에 25년간 터무니없는 돈 지불…대화는 답 아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향후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놓고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면서 이같이 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 전초기지 팜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며 미국령 팜 타격 위협을 계속한 직후 나온 것임.

2017. 8. 31.

■ **美 합참차장 “北 ICBM, 美본토 위협하기엔 아직 역부족”(연합뉴스)**

- 미군 폴 셀바 합동참모본부 차장(공군 대장)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핵무기를 싣고 미국을 정확하게 조준해 타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췄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힘.
-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완성하려면 최소 3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게 셀바 차장의 진단임.
- 미사일이 부서지지 않고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유도 및 안정화 체계를 갖춰야 하고, 탄두가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재진입체가 필요하며, 먼 거리를 비행하기에 충분히 작고 안정적인 핵탄두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양발(發) 위기가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은 임박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셀바 차장은 전함.

■ **분노한 트럼프, ‘대화무용론’ 천명…기존 대북전략 전환하나(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함.
- 이틀 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경노선을 예고했지만, 북한과 대화 효용성을 아베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베 총리와의 통화 때는 ‘지금’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부분도 삭제함.
- 취임 후 석 달여의 대북정책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문으로 열어낸다는 대북 기조를 확정한 지 4개월 만에 변화 모색을 시사한 것임.

■ **北 매체, 美 B-1B·F-35B 편대 동시출격 비난…“부질없는 객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국내 방송사 보도를 인용해 “31일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 상공에 B-1B 핵전략폭격기 편대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시켜 괴뢰 호전광들과 함께 공화국을 핵 선제공격하기 위한 연합 훈련을 감행하였다”

- 고 밝힘.
- 중앙통신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이 훈련을 공화국(북한)의 탄도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놓고 떠벌이며 호전적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적들의 군사적 망동은 우리 군대가 태평양 상에서의 첫 군사작전으로 진행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에 질겁한 자들의 부질없는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7. 9. 1.

■ **“백악관, 대북옵션에 협상도 여전히 포함돼있다고 밝혀”(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의 협상이 여전히 모든 선택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협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말했다고 VOA는 전함.
- 샌더스 대변인은 “(대북 옵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면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선택 방안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나. 북·중 관계

2017. 8. 28.

■ **中, 단거리발사체 도발 북에 “자제하고 정세긴장 피하라” 경고(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해 유관국이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상호 자극과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강조함.
- 그는 그러면서 “유관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 북핵 활동과 한미훈련 중단 맞교환)과 쌍궤병행(雙軌並行: 북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 병행)이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임.
- 그는 이어 “각국이 중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중국 측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채널을 개척하기 바란다”고 말함.

2017. 8. 29.

■ **中, 북한 미사일 도발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평론을 요구하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 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각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함.
- 화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는 것이고, 평화로운 해결책만이 유일한 출구다”고 반대 의사를 밝힘.

2017. 8. 30.

■ **왕이 中외교부장 “北 도발, 국제 핵 비확산 체계 훼손” 비판(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9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함.
- 왕 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런 의견을 피력함.
- 왕 부장은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를 훼손한 행위”라며 “중국은 당연히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다. 북·일 관계

2017. 8. 26.

■ **日 아베 “北 미사일 발사에 고도의 경계감시 태세 유지”(연합뉴스)**

- 스가 장관은 이날(26일)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또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춰 달라”고 덧붙였다고 스가 장관은 전함.
- 스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2017. 8. 31.

■ **日 관방 “대북 추가제재로 원유·석유제품 수출규제 검토”(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새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북 원유·석유제품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한 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검토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외화수입원에 입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교역품인 원유, 석유제품 거래 규제가 선택지의 하나”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이들이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라. 북·러 관계

2017. 8. 29.

■ **러 극동장관 “北 핵실험 탓에 많은 러·북 경제협력 중단”(연합뉴스)**

-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때문에 북한과의 많은 경제협력사업을 축소·중단했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원인이 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 측에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핵·미사일 시험)은 단지 일을 방해할 뿐이고 많은 일을 불가능하게 하며 협력을 제한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북한 측 파트너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고 설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8. 27.

■ 北, ‘한미훈련 안보리 긴급의제 채택’ 요구서한 발송(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긴급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편지를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었다”고 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서한에서 UFG를 거론하며 “시한폭탄과 같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 놓는 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히스테리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뒤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면서 “합동군사연습 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 것을 유엔 안보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2017. 8. 28.

■ 국정원 “유럽 중남미 국가, 북한 공관원 감축…북한 외교 고립 심화”(연합뉴스)

- “대폭 강화된 안보리 결의 이후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내 북한 공관원을 감축해 북한의 외교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함.
- 국정원은 이어 “프랑스, 불가리아, 페루, 멕시코가 북한 공관원을 감축하거나 추방했고, 쿠웨이트 등도 공관원 감축을 결정했다”며 “일부 중동 국가들은 신규 북한 노동 인력 수입을 제한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을 여행 자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2017. 8. 29.

■ 유럽 “北, 추가 도발 자제해야”…北 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각 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함.
-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함.
-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정한 북한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 이행해야 하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또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EU는 주요 파트너국가들과 협의해 그런 협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이탈리아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핵 개발 포기해야”(연합뉴스)

- 이탈리아 정부는 29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추가 발사를 규탄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함.
-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탈리아는 지난밤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실험 및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은 지역 균형을 깰 뿐 아니라 점증하는 큰 우려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알파노 장관은 이어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인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제네바 군축회의 北미사일 발사 규탄…北 “방어수단”(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비판 성명이 이어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던 북한에 대해 “주권국가의 영공으로 미사일을 쏜 행위가 자위권 행사가 될 수 있느냐”며 한목소리로 비판함.
- 이날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한 1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으며, 로버트 우드 미국 주제네바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2017. 8. 30.

■ 호주 “北 미사일 위협은 ‘예측불허’…구축함에 요격체제 검토”(연합뉴스)

- 호주가 해군력을 강화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방위산업장관이 30일 밝혔는데, 파인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전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나온 것임.
- 파인 장관은 이날 애들레이드에서 북한의 “예측 불허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해군 신형 구축함에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쪽으로 성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AAP 통신 등 호주 언론이 30일 보도함.
- 파인 장관은 구축함 성능 강화 방안은 이미 방위 백서에, 그리고 종합 투자 계획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함.

2017. 8. 31.

■ 北 “안보리 의장성명, 자위적 권리 유린…전면 배격”(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31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이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유린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현실을 왜곡하는 의장성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으며,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전략군이 진행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은 미국이 저들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우리의 경고에 호전적인 침략전쟁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답한 데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밝힘.

■ 호주 총리, 북한에 “마피아 같다” 비난…연일 날 선 비판(연합뉴스)

- 턴볼 총리는 31일 호주 TV 및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 도 미사일을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마피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함.
- 톰블 총리는 또 “그들은 협박을 일삼는 상인들”이라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제재를 부과하지 말도록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것으로, 이점이 바로 제재가 부과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으며, “김정은이 매우 매우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고도 비난함.
 - 이와 함께 톰블 총리는 무력 충돌이 북한을 다루는 한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며 경제적 제재 강화에 무게를 실음.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부산선언’…“北도발 심각우려”(연합뉴스)

- 부산에서 열린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36개국 대표단은 31일 “북한의 8월 29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 grave concern)를 표명한다”고 밝힘.
- 회원국들은 이날 오후 회의 결과문서로 발표한 ‘부산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이같이 밝힘.
- 회원국들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긴장 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들을 지지하고, 최근 한국의 관련 구상들에 주목한다”고 강조함.

2017. 9. 1.

■ 영국-스페인, 북한대사 불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 영국과 스페인 외무부가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함.
- 영국 외무부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국무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일 북한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영국이 28일에 나온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함.
- 스페인 외무부도 성명을 내 김혁철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스페인은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잇따른 도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마드리드 북한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정원의 감축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힘.

■ 베트남도 北 탄도미사일 발사 비판..안보리 결의 준수 재차 촉구(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우방인 베트남도 지난달 29일 이뤄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재차 촉구함.
- 1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깊이 우려한다”고 말함.
-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당사국들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26		미 국방부 “한국과 사드배치 모든 사안 계속 조율”(미국의소리)	
	8.28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한미관계 강화 열망”(연합뉴스)	
		美 제재동참 요구에 고심한 韓, '거래주의 촉구'로 절충(연합뉴스)		
	8.29		美 국무부 “미·한, 북한 비핵화하고 불법 행동에 책임 추궁 약속” (미국의소리)	
			한미외교장관 긴급통화…“안보리차원 강력대응 등 단호 조치”(연합뉴스)	
		김동연, 주한 美대사대리 면담…“FTA 우호적 협의 지속해야”(연합뉴스)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긴급통화…“北도발에 단호한 조치”(연합뉴스)			
8.31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 배치·핵잠수함 구비' 거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29		中, 임박한 韓 사드 추가 배치에 “중단하라” 강력 촉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29	고노 “北도발은 폭거”…강경화 “日 위협인식에 공감”(연합뉴스)		

		文대통령-아베 통화...“대북 압력 극한까지 높여야”(연합뉴스)	
	8.30		日외무상, 주일한국대사에 “징용공 문제 해결된 것” 주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29		FT “中, 美에 철강생산 줄이겠다 제안…트럼프가 거절”(연합뉴스)
	8.31		中, 미국산 타이어원료에 반덤핑 조사…미국에 ‘선제공격’(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8.28	미일 정상 안보측근 美서 회동…“대북 긴밀연대 재확인”(연합뉴스)	
	8.29	日, 北미사일 발사에 “엄중 항의”…트럼프·아베 통화도(연합뉴스)	
		트럼프·아베 이틀연속 통화…“대북 압력강화·北정책변경 촉구”(연합뉴스)	
	8.31	미일 국방장관 통화…“北미사일 도발에 압력 강화”(연합뉴스)	
		美日, 전략폭격기 동원 무력시위…北미사일 발사 강력 견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8.31		러 외무, 美틸러슨에 “대북제재 강화 위협, 군사행동 자제해야”(연합뉴스)
	9.1	미, 러시아 외교시설 3곳 폐쇄…자국 외교관 추방에 맞불(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8.26		일본, 북한 관련 중국 기업 등에 추가 제재(미국의소리)
		中, 日의 독자제재 연일 비난…“무책임한 조치 반드시 보복”	

		(연합뉴스)	
	8.30	中교과서에 日과 분쟁 다오위다오 서술 강화...영토갈등 고조 (연합뉴스)	
			日, 중국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경비에 대형 순시선 투입(연합뉴스)
	8.31	中, 日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표명에 우려...“신중히 행동하라”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8. 26.

■ 미 국방부 “한국과 사드배치 모든 사안 계속 조율”(미국외소리)

-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에 “미국은 사드 배치의 모든 사안에 관해 한국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발언함.
- 한국 청와대는 25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28일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힘.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환경평가를 마치면 “임시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발언함.

2017. 8. 28.

■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한미관계 강화 열망”(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에 대한 열망(desire)을 표현하고자 이번에 다시 초당파적 의회 대표단이 방한했다”고 밝힘.
-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양국 국회간 밀접한 교류를 가져왔으며, 이는 많은 이슈에 있어 상호 이해를 도왔다”며 “(이번에도) 국회 인사들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함.
- 강 장관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행정부와 국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美 제재동참 요구에 고심한 韓, ‘거래주의 촉구’로 질충(연합뉴스)

- 정부가 28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러시아 기업(중국 7곳·러시아 1곳) 및 개인(중국인 3명·러시아인 4명)과의 거래에 주의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함.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단둥은행 등을 독자제재 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부에 ‘동반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혐의를 받는 중국·러시아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성격이 있으나, 해당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직접 제재가 아닌 우회적 방식을 택했고, 강도 면에서도 거래 금지가 아닌 거래 주의 촉구 선에 머물렀음.

2017. 8. 29.

■ **미국무부 “미-한, 북한 비핵화하고 불법 행동에 책임 추궁 약속”(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28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을 안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비핵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이 미-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발언함.
- 또한 서로 공유하는 역내와 국제적 우선순위에 대해 일본과의 삼각공조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설명함.

■ **한미외교장관 긴급통화..“안보리차원 강력대응 등 단호 조치”(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대응 방향을 협의함.
- 양 장관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이뤄진 이번 도발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 특히 양 장관은 그동안 한미가 함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경우 다른 기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8월 26일 도발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함.

■ **김동연, 주한 美대사대리 면담..“FTA 우호적 협의 지속해야”(연합뉴스)**

-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면담해 양국 간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김 부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차가 있지만, 앞으로도 한·미

공동위원회의 틀 내에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달함.

-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 간 우호적 협의가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의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함.

■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긴급통화…“北도발에 단호한 조치”(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한·미, 한·일 수석대표가 29일 각각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를 각각 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협의함.
- 연쇄 통화에서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함.

2017. 8. 31.

■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 배치·핵잠수함 구비’ 거론(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구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함.
- 이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 언급과 관련해 “그런 얘기도 오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우리 측의 정책이 이렇다고만 했다”고 발언함.
- 송 장관은 또 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잠수함 구비 문제도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함.

나. 한·중 관계

2017. 8. 29.

■ 中, 임박한 韓 사드 추가 배치에 “중단하라” 강력 촉구(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임박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 완료를 요구했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
- 화 대변인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유관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 전략 균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한국이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이익과 안전 우려를 존중해 사드 진행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발언함.

다. 한·일 관계

2017. 8. 29.

■ 고노 “北도발은 폭거”…강경화 “日 위협인식에 공감”(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고노 외무상은 통화에서 “금일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보시스템을 발령하는 등 국민안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번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강 장관은 이에 “금번 북한의 도발로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협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일 한미·한일·미일 외교장관간 통화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발언함.

2017. 8. 30.

■ 文대통령-아베 통화…“대북 압력 극한까지 높여야”(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해 25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함.
-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고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8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 대응이었다”고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힘.

■ 日외무상, 주일한국대사에 “징용공 문제 해결된 것” 주장(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30일 외무성을 예방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에게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힘.
-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에 따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고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한일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힘.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8. 29.

■ FT “中, 美에 철강생산 줄이겠다 제안…트럼프가 거절”(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중요 주제인 철강과 관련해 중국이 과잉생산량을

- 줄이겠다고 지난달 미국에 제안,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절한 것으로 보도됨.
-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철강생산량을 1억5천만 감축하는 안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제안을 거부했으며 관세부과를 촉구했다고 29일 보도함.
 - 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제안한 감축량은 꽤 많은 양이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초과생산량에 대한 관세부과 등 다른 방식의 해법을 원했기 때문에 양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함.

2017. 8. 31.

■ 中, 미국산 타이어원료에 반덤핑 조사…미국에 ‘선제공격’(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 3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함.
- 3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통해 자국 업체들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소첨가 부틸 고무(HBR)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된 물량에 대해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특수 상황이 있으면 2019년 2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나. 미·일 관계

2017. 8. 28.

■ 미일 정상 안보측근 美서 회동…“대북 긴밀연대 재확인”(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사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긴밀히 연대해 대응해 나가자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함.
- 회담은 지난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전해짐.

2017. 8. 29.

■ **日, 北미사일 발사에 “엄중 항의”…트럼프·아베 통화도(연합뉴스)**

- 29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책을 논의함.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40여 분간 통화를 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아베 총리는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함.

2017. 8. 31.

■ **트럼프·아베 이틀연속 통화…“대북 압력강화·北정책변경 촉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30일 심야(일본 시간)에 30여 분간 통화를 하고 미일, 한미일간 협력으로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책 변경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국제사회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완전히 일치했다”며 “향후 미일, 한미일, 영국 등과 연대하면서 북한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함.
- 아베 총리는 “현재의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에 대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힘.

■ **미일 국방장관 통화…“北미사일 도발에 압력 강화”(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31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미일 긴밀히 연대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압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오노데라 방위상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발 수준과는 다른 심각한 위협”이라고 북한의 지난 29일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책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美日, 전략폭격기 동원 무력시위…北미사일 발사 강력 견제(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31일 미군 전략폭격기 B-1을 동원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29일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한 무력시위에 나선다.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은 이날 오후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을 일본 서남부 규슈(九州)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의 공해상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함.
-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미일간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함.

다. 미·러 관계

2017. 8. 31.

■ **러 외무,美틸러슨에 “대북제재 강화 위협, 군사행동 자제해야”(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 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전날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역에 낙하한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두 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상황이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며 “양측은 (북한의) 이 행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소개함.
-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정치·외교적 방안 모색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과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2017. 9. 1.

■ **미, 러시아 외교시설 3곳 폐쇄…자국 외교관 추방에 맞불(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추방 조치에 맞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등 미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3곳을 폐쇄 조치함.
-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워싱턴DC 대사관 부속건물, 뉴욕 영사관 부속건물 등 3곳을 내달 2일부터 폐쇄한다”고 밝힘.
 -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러시아 내 미 공관 직원 1천여 명 가운데 3분의 2를 축소하라며 미 외교관을 대거 추방 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주도한 평등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발언함.

라. 중·일 관계

2017. 8. 26.

■ 일본, 북한 관련 중국 기업 등에 추가 제재(미국의소리)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일본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6개 기업과 개인 2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힘.
- 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 4개와 개인 1명, 아프리카 나미비아 업체 2곳이 포함됐다고 설명함.
- 일본 매체들은 제재 대상이 북한의 석탄 수입과 해외 파견 노동자 사안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함.

■ 中, 日의 독자제재 연일 비난…“무책임한 조치 반드시 보복”(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 기업 4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등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반드시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인민일보는 26일 ‘일본은 잘못된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이익과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조치를 지속한다면 반드시 일본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함.
- 인민일보 중·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7. 8. 30.

■ **중교과서에 日과 분쟁 다오위다오 서술 강화·영토갈등 고조(연합뉴스)**

- 중일 수교 45주년을 앞둔 가운데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설명을 강화한 교과서를 도입함.
- 중국은 새 교과서에 항일전쟁을 기존 8년에서 14년으로 수정하는 등 유독 일본 관련 부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강화한 내용을 기재해 중일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커짐.
- 새 역사교과서는 중국의 해양 및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을 매우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짱(西藏), 신장(新疆), 대만 그리고 다오위다오, 남중국해 제도 등이 중국 영토로서 역사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역사적 연원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 **日, 중국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경비에 대형 순시선 투입(연합뉴스)**

-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열도 경비 강화를 위해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6천 500t급 순시선 한척을 건조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함.
- 이를 위해 해상보안청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46억엔(약 470억 2천만원)의 비용을 반영함.
- 새로 건조하는 대형 순시선은 2021년 현장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7. 8. 31.

■ **中, 日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표명에 우려…“신중히 행동하라”(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북한 도발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은 지역 내 위협을 이유로 국방예산과 군비를 매년 늘려왔다”며 “각국은 일본의 진짜 의도를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함.
- 화 대변인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국제사회와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 안보 영역의 정책과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

이 아시아 이웃 국가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군사 안보 영역에서 신중히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8.26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3건 정보 제공 요청(미국의소리)
	8.31	유엔 총회, 김정남·웬비어 언급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자유아시아방송)
	9.1	틸러슨의 '상근 대북인권특사 폐지구상에 美정치권 반발(연합뉴스)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차관이 북한인권특사직 겸임"(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8.26	북, 국경 경비대에 '밀수 단속 말라' 은밀히 지시(자유아시아방송)
	8.28	북 주민, 이달 시행 러 극동지역 전자비자 신청 '전무'(자유아시아방송) 북,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한 만큼 주민통제력 향상(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8.30	민주평통 해외 첫 여성 부의장 이숙진씨 "개방=인권=통일"(연합뉴스)
	8.31	기대 모았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올해도 '먹구름'(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8.26	영국 유력 일간지, 런던 교외 탈북자 정착촌 소개(미국의소리)
	8.27	탈북자 재입북 여파 탈북민 가족으로 번져(자유아시아방송)
	8.28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등장...탈북민 출연방송 비난(연합뉴스)
	8.29	영국 시민권 취득 북한 국적자 지난 10년간 317명(미국의소리)
	8.30	조명균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과제...상봉재개 다각 노력"(연합뉴스) 중국의 탈북단속과 도강비용 상승(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8.29	유니세프, 상반기 북한 영양실조 어린이 4만명 치료(미국의소리)
		일방적 대북지원 넘어 개발협력 방식 전환 필요(연합뉴스)
	9.1	UNDP, 대북사업 연장 결정 또다시 연기...내년도 신규 사업 불투명(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8. 26.

■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3건 정보 제공 요청(미국의소리)

- 유엔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73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73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집계됨.
- 이 같은 사실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해 다음 달 열리는 제 3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드러남. 실무그룹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청에 해마다 똑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북한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실종 의혹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협조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 다시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으며,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2017. 8. 31.

■ 유엔 총회, 김정남·웬비어 언급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상황보고서’가 공개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16쪽의 ‘북한인권상황보고서’(A/72/279)가 최근 공개됨.
- 보고서는 지난해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의거해 작성됐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총회에 제출하게 됨. 이번 보고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사건이 언급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끄.
-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지난 6월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씨의 사건의 내용도 담김. 아울러 보고서는

- 북한이 여전히 미국인 3명과 한국인 9명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보고서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에 워비어 사망과 관련한 명확한 이유를 밝힐 것과 억류된 시민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아울러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및 이산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 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김.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함.

2017. 9. 1.

■ 킬러슨의 ‘상근 대북인권특사’ 폐지구상에 美정치권 반발(연합뉴스)

-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상근직인 대북인권특사의 직위를 격하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31일(현지시간) 지적함.
-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로긴은 이날 ‘킬러슨이 상근 대북인권특사를 폐지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10년간 상근직 고위관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고 있었지만, 킬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추구가 심화하면서 더는 특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함.
- 그러나 “그 지위를 격하하는 결정은 의회에서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며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한 시기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어리석은 후퇴를 했다고 지적한다”고 그는 덧붙임.
- 킬러슨 장관은 지난 29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인권특사와 북핵 6자회담 특사 등 70개에 달하는 특사와 특별대표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그러면서 대북인권특사실의 기능과 직원들을 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산하로 이관함.
- 현재 대북인권특사는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식임.

■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차관이 북한인권특사직 겸임”(미국의소리)

-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북한인권특사 직이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힘. 다만,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는 대신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특사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 같은 겸직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임.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의 업무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의 업무에 통합되면 지식과 재원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보고 권한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되며, 통신채널이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외교력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힘.
-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새라 시월 전 차관이 지난 1월 사임한 후 공석인 상태임.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인권특사 직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북한인권특사 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8. 26.

■“북, 국경 경비대에 ‘밀수 단속 말라’ 은밀히 지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국경 연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민간인들의 강 무역 행위, 즉 밀수를 단속하지 말도록 은밀히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해 경제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소위 강 무역, 즉 밀수를 통해 외화벌이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국경경비대에 민간인들의 강 무역 즉 국경 밀수행위를 지나치게 단속하지 말라는 밀명을 내렸다”면서 “이는 사실상 민간인들의 국경 밀수행위를 묵인하라는 지시”라고 주장함.
- 소식통은 “이러한 밀명은 최고 지도자(김정은)의 승인 내지는 묵인 없이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 북한 경제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강조함.
-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최근에 조선 내부의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강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성격으로 일정액을 국경경비대에 바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의 묵인 하에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면 국경경비대도 형편이 좀 쪼개 될 것”이라고 말함.
- 소식통은 “국경경비대가 밀수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밀수행위를 방조하는

일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가 대놓고 이를 양성화한 것”이라고 밝힘.

2017. 8. 28.

■ **“북,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한 만큼 주민통제력 향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370만명을 초과했지만 그만큼 주민 통제력이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도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옴.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올해 3월 현재 북한 전체 인구 약 2천500만명 대비 15% 수준인 약 370만명으로 조사됨. 이 수치는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가 25일 ‘북한 내 휴대폰 이용 현황’이란 보고서에서 나온 수치임.
- 그러면서 보고서는 “평양에 국한할 경우 보급률이 약 70% 전후에 달하지만 평양 외 농촌 지역은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력이 향상됐다”고 지적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위층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지방도시는 경제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매우 낮다고 설명함. 북한에서 빈부 격차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분석임.
- 아울러 북한 주민들은 국영 휴대전화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효과적인 감시와 검열 수단을 지니게 돼 북한 당국의 정보 장악력이 향상됐다고 지적함.

■ **북 주민, 이달 시행 러 극동지역 전자비자 신청 ‘전무’(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가 이달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했지만 이제껏 단 한 건의 비자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뒤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항과 크네비치 공항 등 2곳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음.
- 극동지역 해외 투자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사실상 해당지역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평가됨. 이 때문에 애초 이번 간편 전자비자 도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 전자비자를 신청한 북한 주민은 한 명도 없는(8월 25일 기준) 것으로 확인됨.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의 잦은 도발로 북러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있다는 지적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8. 30.

■ 민주평통 해외 첫 여성 부의장 이숙진씨 “개방=인권=통일”(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9월 1일 출범함. 국내외 총 1만 9천 710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고, 이 가운데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은 122개국 43개 지역협의회 3천630명임.
- 김덕룡 수석부의장을 포함해 부의장은 국내 15명, 해외 5명을 두고 있음. 이숙진(56) 전 호주협의회장은 해외지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의장에 임명됨. 그는 호주·뉴질랜드 등 대양주와 서남아, 동남아 남부와 북부, 서부, 중앙아시아 지역의 7개 협의회 소속 638명의 자문위원을 대표함.
- 출범식과 간부·임원 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이 부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제18기 활동 방향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2년 동안 활동하겠다”며 “특히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를 펼치는 데 자문위원들이 나서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힘.
- 그는 이어 “강연회, 포럼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 및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자문위원들이 거주국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 앞장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함.

2017. 8. 31.

■ 기대 모았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올해도 ‘먹구름’(연합뉴스)

- 경기도가 새 정부 들어 관련 예산 20 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악화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12억 5천만원이 전부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난 6월 외국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 결핵 환자 지원사업으로 5 억원을 집행한 것이 유일함.
- 나머지는 국내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대북지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로 지원사업, 중국 교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공동체 지원사업 등임.
- 도는 올해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과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50 억원 안팎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 초보다 다소 늘어난 135 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8. 26.

■ 영국 유력 일간지, 런던 교외 탈북자 정착촌 소개(미국의소리)

- 영국 런던 교외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장문의 특집기사가 영국 유력 일간지에 실렸음. 잔인한 북한 정권을 탈출한 이들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25일, 런던 외곽 뉴몰든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기사를 실음. 신문은 뉴몰든이 1960년대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한인 마을로, 약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의 주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1990년대 이후 기아와 식량 부족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이어, 지금은 약 1천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북한 출신 주민들의 정착지라고 전함.

2017. 8. 27.

■ 탈북자 재입북 여파 탈북민 가족으로 번져(자유아시아방송)

- 임지현씨와 함께 남한 TV에 출연했던 탈북민의 북한 내 가족들이 보위부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밝힘.
- 북한으로 재입북한 임지현(전혜성)씨를 두고 자진입북이나, 유인납치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와 함께 남한에서 활동한 탈북민의 북한가족들이 보위부의 강도 높은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옴.
- 22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박모씨는 “며칠 전 북한의 가족들이 도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중국을 통해 들었다”면서

“임지현의 재입북이후 혹시나 하고 걱정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박씨는 “임지현의 재입북 소식을 듣고 가장 걱정했던 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문제였다”며 “임지현과 함께 TV에 출연하면서 서로의 고향과 가족얘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은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고 언급함.

2017. 8. 28.

■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등장…탈북민 출연방송 비난(연합뉴스)**

-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임지현(북한명 전해성)씨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또 등장해 일부 국내 종합편성채널의 탈북민 출연프로그램을 비난함.
- 북한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반공화국 모략선전물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전해성의 증언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약 3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함.
- 남성 사회자는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실상을 왜곡·날조하는 모략편집물들을 대대적으로 제작하고 광범하게 유포시키고 있다”며 일부 종편의 탈북민 출연프로그램을 거명함.
- 이어 인터뷰 형식으로 편집된 화면에 등장한 임씨는 “모략방송 대본은 탈북자단체나 반공화국 모략방송사 구미에 맞는 것을 골라 인간쓰레기들의 거짓말을 막 부풀려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함.

2017. 8. 29.

■ **영국 시민권 취득 북한 국적자 지난 10년간 317명(미국의소리)**

- 지난 10년 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300명을 넘음.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뒤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빠르면 6년이 걸림.
- 영국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시민권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363명임. 이 가운데 87%인 317명이 영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 별로는 2015년에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3명, 2014년 41명이었음.
- 특히 2012년 이후 5년 사이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271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민권 취득이 이뤄짐. 지난 10년 간 시민권을 취득한 317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9명, 시민권 취득자의 자녀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53명 포함됨.

2017. 8. 30.

■ **조명균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과제…상봉재개 다각 노력”(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산가족 문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상봉행사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서울 거주 이산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위로행사를 열고 “정부는 어려운 안보 상황을 극복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면서 “남북 이산가족 모두의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함.
- 이어 “아직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풀어드리는 길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함.
-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도 이산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르신들이 한평생 겪어오신 아픔은 우리 국민과 민족 모두의 고통”이라며 “어르신들이 만들어오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중국의 탈북단속과 도강비용 상승(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이 이달 들어 북한과 함께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버스와 열차 터미널에서 신분증을 검사한 후, 탈북의심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는 중국에서 최근 탈북민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강제북송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
- 중국 당국의 탈북자 체포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한중간 관계 악화가 한몫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전함.
-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누구보다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탈북민 강제복송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

5. 대북지원

2017. 8. 29.

■유니세프, 상반기 북한 영양실조 어린이 4만명 치료(미국의소리)

- 유엔은 올 상반기에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사업을 중점 진행했다고 밝힘. 영양실조 어린이 4만 명을 치료하고,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 등 영양을 지원함.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올해 상반기 북한 전 지역의 90%인 189개 시, 군에서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사업 (Community-based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을 진행했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28일 발표한 ‘북한 2017 상반기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취약계층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이같이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천8백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20만여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상태임.
- 유니세프는 올 상반기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 사업으로 4만여 명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와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를 치료했다고 밝힘.

■“일방적 대북지원 넘어 개발협력 방식 전환 필요”(연합뉴스)

- 북한 대북지원사업을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 제주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등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라는 주제의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밝힘.
- 최 연구위원은 “긴급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개발협력 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일방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사회시스템 변화를 하부단위에서나마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함.
- 이어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협력

단위의 자생력을 높여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 경제와 외부 시장을 연계시킬 수도 있고,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2017. 9. 1.

- UNDP, 대북사업 연장 결정 또다시 연기…내년도 신규 사업 불투명(미국의소리)
 - 유엔개발계획 UNDP가 이달 (9월) 초 열리는 하반기 유엔 정기 집행이사회에 또다시 대북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 북한 국가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5일 열리는 유엔 집행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하지 않음.
 -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유엔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말 종료된 ‘2011~2015년 대북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임.
 - 유엔개발계획은 앞서 올해 초 열린 상반기 정기 집행이사회(First regular session 2017)와 5월 말 열린 유엔 연례 정기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annual session 2017)에서도 대북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
 - 유엔개발계획은 지난해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농촌 지역 에너지 개발, 환경, 재난 대응 등 4가지 분야 사업을 진행함.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내 유엔기구 주재관들 간의 조정 역할을 하는 상주조정관 역할도 맡고 있음.